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중소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방안	서수정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김용국
	건축 아카이브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이규철
	자연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연구	이은석
	건축자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방안 연구	심경미
	도시 내 공공건축 저층부 및 외부공간 개선방안 연구	임유경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에 기반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효율적 조성방안 연구	염철호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거버넌스 기반 이용자 참여디자인 및 제도개선 방안	박석환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김은희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한옥적용 활성화 방안	신치후
	중소도시 마을연계형 혁신거점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윤주선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공간 조성 방안	김상호
	한옥 공공건축물의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김가람

기본과제

① 중소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방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4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이 계획수립기간이 길고 실행력이 낮아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주거지 정비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복지실현과 일자리창출, 공동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5년 동안 10조 3,7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시한 5개 사업유형과 프로그램은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 중소도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인적자원, 활용 가능한 자원 미흡 등으로 중앙정부가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현장의 고충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하여 지역 활성화 관련 사업이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으나 인적, 물리적, 문화적 자원이 제한된 지역에서 사업간 상호 연계나 조정과정 없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재정보조 이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사업마다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이 운영자를 찾지 못해 일부 시설이 다시 유휴공간으로 남기도 하며, 중소도시에 퍼져 있는 빈집, 빈 점포마다 청년창업시설이나 문화예술가를 유입하는 사업은 입주자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지방 중소도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성장동력도 낮은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쇠퇴지역에서 집중 관리해야 할 공간과 활용 가능한 지역의 사회문화적, 물리적 자원을 선별하고, 인구감소시대에 맞추어 외곽개발을 조정하면서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를 전제로 국비재정보조 사업을 기획해야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 전략 마련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에 대응하여 이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와 사회경제적 상황이 다른 지방 중소도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재생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업구역단위로 사회, 문화, 경제적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완결적인 기존 재생방식에서 벗어나 가치 있는 지역자원을 매개로 지역 차원의 종합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규모에 맞는 적정 영역의 거점공간을 구도시의 경제, 문화, 복지 거점으로 조성하고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주변 공동체 단위의 주거지를 연계할 수 있는 공간관리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중소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서수정

②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현대 도시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설계 대안이 필요하다. 21세기 도시는 기후변화, 환경 재난 재해,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불평등 불균형 현상 심화 등 사회경제 및 환경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시의 목적에 따라 건물과 공간의 물리적 조직에 관여하는 기술적 활동을 의미하는 도시설계 방식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스마트시티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도시의 경영, 거버넌스, 장기적 계획과 설계를 개선하는 도시”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ICT 중심 산업클러스터, 유비쿼터스도시, 스마트도시에 이르기까지 스마트시티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은 AICBM(AI, IoT, Cloud, Bigdata, Mobile)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적용 기반 확대 위주로 진행 중이다. 디지털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 정책만으로는 시민 공감대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스마트시티 도시 공공공간의 디자인과 서비스 품질 향상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으로서 스마트 도시 공공공간의 조성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스마트시티 도시 공공공간의 조성 관리 및 이용 현황을 분석한다. 도시설계적 관점에서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한다. 기 건설된 스마트시티 도시 공공공간 이용행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스마트 도시설계 개념 정립과 관련 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스마트 도시 공공공간 조성 관리 지원 도구를 개발한다. 스마트 도시 공공공간의 가치 기준(Value Criteria)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 요소와 서비스 요소를 도출한다. 이를 종합하여 스마트 도시 공공공간 조성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넷째, 스마트 도시 공공공간 조성 관리 지원 도구를 시범 적용하고, 사회 경제 및 환경적 효과를 추정한다. 다섯째, 스마트 도시 공공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제도와 계획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김용국

③ 건축 아카이브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건축 아카이브는 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재 활용, 철거, 관련 연구 및 사회적 이슈, 관련 기관 및 인물 등 다양한 차원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록물의 보관뿐 아니라 교육 및 산업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건축 정보를 디지털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자료 역시 디지털 스캔 등을 통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정보의 습득도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다양한 주체가 구축한 대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개별 건축 아카이브를 통합한 디지털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국가한옥센터에서는 한국건축 아카이브를 수년간 구축해 오고 있으며, 건축 아카이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하기 위해 개별 아카이브의 지원과 디지털 자료의 검색 및 열람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세종시에 건립 예정인 도시건축박물관에서는 도시건축 아카이브를 주요한 기능으로 삼고 있으며, 아카이브 콘텐츠의 구축을 위해 개별 건축 아카이브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도시건축박물관의 구축 방법론으로서 건축 아카이브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대상의 확장과 이용의 통합을 고려한 건축 아카이브 통합 시스템의 구축 프로세스와 활용 방안을 기획하고자 한다. 건축 아카이브 정보를 통한 검색하고 원문 자료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양과 질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건축 아카이브의 구축 방법과 활용 범위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연구기관, 박물관, 도서관, 정부기관 등 다양한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건축과 도시에 관계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건축박물관의 아카이브의 체계를 마련하는 기획 연구가 될 것이다.

이규철

4 자연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연구

최근 10년간 대설·한파, 가뭄, 폭염, 태풍·호우 등 이상 기상현상에 따른 인명·재산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7, 2016년 이상기후 보고서). 그중 호우와 폭염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이상 기상현상 중 피해 규모와 범위가 매우 크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 중 80~90%를 차지하고, 2018년 폭염과 열대야는 전 국민에게 기후변화를 체감케 한 현상이었다.

도시화율이 90%를 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자연재해·재난의 인명·재산 피해 또한 도시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 주요 재난 대응정책인 도시 방재계획은 과

거 재해기록을 근거로 수립·운영된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자연재해는 과거 자료와 다른 경향을 보인다. 발생 빈도, 재해규모, 범위, 발생위치 등 과거 경험에 기반한 예측범위를 넘어서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도시 재해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2차 기술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사전에 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의 대응책으로 도시 탄력성 강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예방적 관점에서 건축과 도시가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이 자연재해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탄력적 도시설계를 위해 필요한 공간요소와 구조화 방법이 무엇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재해·재난에 취약한 도시지역을 찾고 취약한 지역의 탄력성을 증진시켜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 구조적 차별성을 고려한 공간적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호우와 폭염을 대상으로 취약한 지역의 탄력성 증진 요소를 찾고, 도시의 구조적 특성을 설계적으로 정리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자 예상 결과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시설계 제도가 도시 탄력성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적 근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은석

5 건축자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방안 연구

2014년에 제정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은 건축자산의 박물관식 보존을 지양하고, 현대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을 강조하고 이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법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역할과 정책을 담은 기본 계획이 수립(2015.12)되었으나 국가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며, 그마저도 한옥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건

축자산은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문화재와 달리 지역 또는 일상생활공간에서 사회 문화적, 경관적 가치까지 포함하는 역사문화환경에 의미를 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관리 및 지원의 주체는 지자체로 두고 있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양의 건축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해 공공 차원의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건폐율 완화, 건축선 지정 완화 등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과 같은 간접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자체 시행계획과 기초조사가 시작단계에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지자체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법 제32조) 등 다양한 지원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축자산은 개보수를 위한 수선비 지원 외에 시민과 공무원 등의 인식 개선과 자산 발굴, 기술 및 사업체 지원, 지역역사경관관리, 주민참여 등 다각도의 접근과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인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역사적 건물들이 지역과 도시의 재생에 기반을 제공하며, 이러한 건물들과 지구들을 재생하는 것이 커뮤니티를 증진하고 지역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이 국내외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건축자산의 관리와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을 정리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 방향과 제도적 행재정적 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자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경미

스 범위를 점차 확대하면서 공공건축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양적으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관심도 증가하였으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좋은 공공건축을 실현하기 위한 규범과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재하여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전문가의 역량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공공건축은 단일한 용도를 담는 개별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거점으로서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조성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건축물의 저층부와 외부공간은 이용자가 접근하는 공간이며 주변 공공공간과 만나는 지점이므로 보다 개방적이고 쾌적하게 조성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공건축물 외부공간을 개선하여 여가와 휴게 등 다양한 활동을 수용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는 축매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조성 전 단계에서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은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사람보다는 차량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공공건축물과 주변 공공공간을 연결하는 공간이 오히려 건축물을 도시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도시 내 공공건축물 저층부 및 외부공간에 대한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 저층부 및 외부공간을 개선하고, 공공건축물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으로 거듭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유경

6 도시 내 공공건축 저층부 및 외부공간 개선방안 연구

정부는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과 ‘지역’ 중심의 생활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공공서비

7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에 기반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효율적 조성방안 연구

정부는 2018년 8월 ‘공간 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탈피하며, ‘사람 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생활밀착형 SOC 확충방안을 발표하였다. 2019년에만 약 8.6조원의 정부예산이 생활밀착형 SOC에 투입되며, 2020년부터 ‘생활밀착형 3개년 계획’에 따라 생활SOC 분야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SOC에 포함되는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어린이박물관 등의 시설은 지금까지 대부분 인구규모 또는 지자체별 균등배분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공급되어 왔다. 이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생활밀착형 SOC 예산 확보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는데, 생활밀착형 SOC 확충이 지역수요에 대한 충분한 파악 없이 단기간 내 공급목표 달성에 치우쳐 추진될 경우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과 함께 조성 후 시설 이용률 저하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SOC를 포함한 지역 공공시설은 이제 과거의 양적 공급 위주에서 자산관리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개념에서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기존의 상향식(top-down)의 사업 결정과 예산전달체계가 아닌,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의사결정시스템과 정책 집행방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인 자산관리에 기반하여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밀착형 SOC의 체계적인 조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 전략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생활밀착형 SOC 조성에서의 종합적 자산관리 개념 도입의 필요성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의 생활밀착형 SOC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수급관리체계의 한계를 살펴본 다음,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인 자산관리 개념을 적용한 생활밀착형 SOC의 효율적 조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엄철호

8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거버넌스 기반 이용자 참여디자인 및 제도개선 방안

2018년 8월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으로 여가 및 건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람과 지역 중심의 생활인프라(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에 2019년에 1.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한 지역의 공공건축물이 이용자 특성 및 지역 여건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못해 이용률이 낮거나 또는 반대로 과소하게 조성되어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아직까지 빈번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필요 인프라의 공급에 방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조성하는가에 대한 과정에도 집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내실 있는 공공건축 사업을 위해 이용자 참여 및 구체적인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당위성 바탕으로 공공건축물 분야에서 참여 디자인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다양한 참여디자인 틀을 기반으로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주민 참여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공부문 건축 디자인 업무기준’상에 규정하고 참여디자인 관련기준을 구체화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마련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절차 등과 연계하여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참여 디자인 관련 주체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칭)공공건축 참여디자인 운영 지침’을 도입하여 공공, 전문가, 주민 등이 함께 만드는 생활밀착형 SOC 시설이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석환

9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분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붕괴, 화재 등 주요 건축물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 화재발생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연간 화재발생 건수는 평균 4만 건이고 이 중 약 2만 5,000건(60% 이상)이 건축물에서 발생하며 그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붕괴사고 또한 2009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18년 기준 연평균 344건에 이른다. 특히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진단 누락, 현장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태풍, 폭염,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위험 대응 필요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설정하고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건축물 관리법'을 통한 건축물 사용 과정의 안전성 확보방안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축물 안전관리는 건축물 사용 단계에 치중한 '점검·진단'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리대상 또한 내진성능을 제외하고 대부분 1,000m² 이상의 중대규모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기존 건축물 약 720만 동 중 85% 이상이 500m² 미만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안전관리는 지극히 특정 대상에 제한적이라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며 건축물 안전관리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건축물과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건축물의 안전관리 활성화 및 성능 강화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관리도구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분산된 안전관리대상을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건축물 계획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중장기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추진과 국민 생활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은희

10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한옥적용 활성화 방안

세계유산에서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UNESCO, ICOMOS, EU 등 국제적으로 농촌유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UNESCO의 경우 경제활동이 지속되어야 유산도 보존할 수 있는 농촌의 특성 때문에 '살아있는 유산'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평가, 관리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우리의 농촌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를 통하여 농촌경관의 훼손과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 「농어촌정비법」(1994),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1995) 등을 바탕으로 한 개발은 농촌지역에 많은 비농업적이거나 이질적인 시설의 도입을 유발하였다.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의 결과, 마을 내 재래농가, 새마을 주택, 도시형 양옥, 유럽의 전원주택풍의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주택들이 공존하고 주변 환경과 이질적인 주택 유형이 농촌의 경관을 저해하므로 지역의 입지특성을 반영하는 주택 보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유관사업으로 '농어촌표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단순하게 일정 수준의 주택환경정비를 넘어서 품격 있는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주택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은퇴 후 귀농의 증가에 따라 전원주택, 귀농주택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축뿐만 아니라 지역에 산재한 한옥을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체성을 높이는 요소로서 한옥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양질의 주택으로서 한옥과 한옥형 농촌주택 보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포용국가를 위한 농촌의 다원적 가치 확산(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촌다움', '전통문화의 계

승', '공동체적 가치와 자산화 전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치후

11 중소도시 마을연계형 혁신거점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최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스페이스사업, 행정안전부의 사회혁신 기반조성사업 등 도시와 마을 단위에 물리적 거점을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정된 사업기간 동안 사업비 대부분을 물리적 공간 조성에 사용하는 반면 공간 조성 이후 운영관리에 대한 방안은 뚜렷하지 않아 사업 종료 이후 공간의 유희화가 빈발하고 있다. 사업 종료 이후 공공 주도로 공간을 관리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연속적인 공간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안으로 언급되는 주민 주도 관리의 경우에도 역량 강화 교육을 몇 차례 수료한 주민공동체에게 전문성을 요하는 거점공간 운영을 위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비교적 유동인구가 적고 구매력이 낮아 공공사업만으로 자체 운영이 가능한 수익을 지속 창출하여 자립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거점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면서도 자립이 가능한 운영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에 적용 가능한 마을연계형 혁신거점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간 유형별 운영전략, 운영 가이드라인, 제도화 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마을연계형 혁신거점, 지역관리회사,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에어리어 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 등 국내외 관련 개념과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적용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운영되고 있는 마을연계형 혁신거점 사례의 효과 측정을 위해 리빙랩방식의 현장 시뮬레이션을 추진하고자 한다. 공주·부여·시흥 등 거점공간을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간 유동인구 변화

량 분석, 지역기여도 분석 등 현장 밀착형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마을연계형 혁신거점 지원정책 추진 및 제도화를 위해 혁신거점 앵커시설의 조성 and 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정책사업 제안을 위해 사업 선정 절차, 심사기준 등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윤주선

12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공간 조성 방안

문화의 다변화는 주택정책의 핵심이슈이다. 국내 총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 가구의 증가는 청년, 미혼독신, 고령 등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통적인 혈연 기반의 가족 중심 생활에서 벗어난 사회적 가족의 개념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고령가구의 주거 축소, 맞벌이가구의 육아 가사 분담,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1인 가구의 주서서비스 수요 등 생활양식과 주거 가치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주거수요도 다양화, 복잡화되는 양상이다. 반면에 우리의 주거공간 공급과 조성 정책은 기존의 공급 방식을 답습하면서 변화하는 주거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 가구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적정 주거공간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주거공간의 본질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관련 기준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여건에 대응하는 주거공간 조성 및 운영지침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생활양식의 다변화를 설명하는 인구 가구구조의 변화양상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최근의 새로운 주거유형 개발 및 관련 기준을 분석한다. 또한 현행 주택정책의 동향 분석을 통해 제도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주거공간의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규모 적정성에 관한 논의와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김상호

전통 주거문화의 보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중앙정부의 2007년 '한스타일 종합 육성계획', 2010년 '국격 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이 수립되며 본격적으로 한옥 지원 정책 추진되었고, 2019년도 현재 전국 총 91개의 지자체에서 한옥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한옥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정책의 주요 골자인 보조금의 경우 지원 대상은 주거용도 한옥건축이고, 그 결과로 복촌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등이 유명세를 얻으며 전통건축양식 보존을 통한 지역 경관 향상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한옥마을의 주거용도 한옥은 대부분 사유지로 내부 입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한옥의 홍보효과가 외관에 한정되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한옥이 좋아 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어도 아파트 위주의 주거용도 건축시장에서 개인이 한옥을 신축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주거용도 위주의 한옥 건축 시장의 확장성에는 제한이 있다.

반면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한옥 공공건축물은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주거용도 위주 한옥건축 시장에서 신규 수요를 발생시켜 한옥건축 시장의 확대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지역 활성화와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고, 지자체의 관련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좋은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도서관, 주민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한옥 공공건축물을 보급하여 주민들이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한옥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한옥 공공건축물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운영되고 있는 한옥 공공건축물의 현황을 조사하여 한옥 공공건축물로 공급 가능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분석하고, 한옥 공공건축물 공급 활성화의 근거로 실증적인 운영성과를 제시하여 중앙부처 관련 사업과 연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도시재생 특강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월 7일(목)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중회의실에서 도시재생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지방 인구위기와 재정 분권의 딜레마'로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의 저자로 유명한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가 저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마강래 교수는 지방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추이 등을 소개하고,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 도시 정책의 근본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분권과 이를 위한 재정분

권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어 일본의 공간전략 사례로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에서의 뭉치기 연결하기 전략(Compact & Network)을 소개하였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도시권과 지방살리기를 연결하는 혁신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광역화', '혁신거점 육성', '연계사업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후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토론을 통해 발제자와 참석자들이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의 방향 및 실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민영



제1, 2차 경관 릴레이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월 13일(수), 3월 28일(목) 두 차례에 걸쳐 2019년도 제1, 2차 경관 릴레이 세미나를 열었다. 경관 릴레이 세미나는 경관과 관련된 이슈와 진행된 연구성과를 소내 연구진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관 유형별로 연구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1차 경관 릴레이 세미나에서는 이차희 박사(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농촌 일상경관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과 경관정책'을 주제로 수행한 연구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차희 박사는 경기도 이천시 산수유마을을 대상으로 도시근교 농촌 거주민의 주관적 경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와 그 진행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거주민의 경관인식에 기반한 경관 계획·관리의 중요성과 실행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2차 경관릴레이 세미나에는 이재용 소장(사이트플래닝 건축사무소)이 발제자로 참석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소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만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과 운영 방안, 디자인 전략 등을 설명하고 판교창조경제밸리에 적용된 사례를 소개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앞으로 산지경관, 도서지역 경관 등의 주제로 경관 릴레이 세미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제1차 기후변화 전문가 릴레이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3월 27일(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제1차 기후변화 전문가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기후변화 전문가 릴레이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실무 연구자를 초청하여 최신 연구 성과를 듣고, 함께 시사점을 찾아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신진동 시설연구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신진동 시설연구관은 안전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통계·증거 기반의 기술로서 '지역안전지수'*의 개발과 운영 과정을 발제를 통해 소개하였다.

특히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 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산출 방법을 적용한 점 등 지역안전지수가 실제 지자체 정책 수립에 활발히 활용되는 자료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오는 4월 제2차 기후변화 전문가 릴레이 세미나 등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최신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석



* 지역의 안전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건수 등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7개 분야에 대한 위험지표와 상관성이 높은 요인들을 통계적인 회귀 분석을 통해 산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에 선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에 선정되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법인을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 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비롯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각 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수출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학·연 및 민간과의 소통과 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스마트 건축제도 개선 지원, ▲스마트 도시설계 정책 수립 지원, ▲스마트도시 인식조사 및 지자체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추진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조상규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개최된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건축의 다양화·현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옥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2011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9 회째를 맞았다.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주제는 '한옥, 도시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다'로, 도시마을 재생의 거점역할을 하는 한옥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시선을 찾는다. 도시마을 재생의 기준이 되고 도시마을 건축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며, 도시에 개성을 입히고 재미있는 도시풍경을 만들 수 있는 한옥의 모습과 실행 아이디어를 이번 공모전을 통해 모색해보는 것이다.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계획·준공·사진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작품 접수는 8월 5일(월)부터 8월 8일(목)까지 4일간 한옥공모전 누리집(<http://competition.hanokdb.kr>)을 통해 하면 된다.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감정원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3월 5일(화)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감정원과 스마트도시-녹색건축 정책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한국감정원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지정 녹색건축센터로서 연구 협력, 녹색건축한마당 행사 공동 참여 등 녹색건축 정책 및 사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스마트도시 및 녹색건축 정책 개발을 위한 학술 교류 및 정보 공유, ▲한국감정원 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개발 및 정보체계 활용방안 연구, ▲스마트도시 정책과 연계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고도화 방안 연구,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세미나·포럼 등 정책 성과 확산을 위한 공동 행사 개최 등 관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녹색건축을 융합한 스마트·녹색건축 정책 개발을 지원할 예정으로, 건물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및 지능형건축물 (IBS) 인증제도 운영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실증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도시와 녹색건축이 융·복합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도시재생 및 생활SOC 사업 등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영주시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영주시가 3월 7일(목) 영주시청에서 지역재생 및 노후주거지 재생 모델 발굴의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영주시는 2007년 영주시의 '공공건축·공공공간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위한 디자인관리체계 구성 및 조직 설치,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등 영주시 구도심 재생을 위해 협력해 왔다. 그 추진 과정에서 영주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2010년부터 디자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공급 및 공공건축가 참여 확산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영주시는 앞으로 ▲지역재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애로사항 및 현장문제 공유, ▲지역재생 사업에 필요한 공동조사 및 연구·정책 정보 교류, ▲지역재생사업 관련 공동 세미나, 교육 등 행사 개최 및 참여 등 업무 협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소멸위기에 놓인 중소도시가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결합형 주거재생 모델을 개발하는 데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고영호